

푸틴체제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조 한 범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10

예상했던 대로 푸틴은 이번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6년간 러시아를 이끌 지도자로 자리매김 했으며, 연임에 성공할 경우 푸틴의 집권기는 향후 최대 1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련체제 붕괴의 상실감을 메워줄 강한 러시아에 대한 향수, 푸틴을 대신할 대중적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러시아의 정치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푸틴의 재집권은 오래전부터 당연시 되어 왔다. 푸틴이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 체제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실력자였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정권교체가 아니며, 따라서 러시아가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나 푸틴이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지도자로 등극한 이상 일정한 변화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외정책에 있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대외정책 기초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미·러 양강체제의 형성을 목표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자임하게 될 것이다. 이미 푸틴은 2월말 러시아 국내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대외정책 기초를 밝힌바 있다. 푸틴은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서방의 개입 방식을 비판하는 한편 이에 맞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리아에는 러시아의 해군기지가 있고 이란과 러시아는 강한 경제, 군사 협력을 맺고 있다. 푸틴은 중국의 정치, 경제적 부상을 높이 평가하고 국

제질서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 중·러 협력관계의 강화를 예고했다.

푸틴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 주도의 세계질서체제에 반대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푸틴체제의 러시아가 리비아 사태 해법과 같은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현안에 있어 러시아 대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긴장관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푸틴 재선 확정과 동시에 ‘미·러 협조시대의 마감’이나 ‘세계 신 냉전국면 가능성’ 등의 표현들이 언론에 등장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소를 위한 국제정치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간의 협력관계 확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북핵문제 해법 도출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간의 특수관계에 러시아가 현재 보다 더 협력할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푸틴의 재집권 체제는 몇 가지 제약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지지율이 과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반 푸틴 진영이 조직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반 푸틴세력의 상당수가 젊은 층들이며 러시아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이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석유·가스·연료 등 지하자원이 수출의 70%에 달하는 취약한 러시아의 무역구조도 푸틴에게 부담이다. 푸틴의 인기비결이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 위기 및 유가하락 국면이 도래할 경우 푸틴체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는 푸틴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대외정책의 구사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 한반도 정책 전망

‘북핵에 반대’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흔들기 역시 반대’한다는 푸틴의 언급과 같이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소련 붕괴이후 전방위외교를 지향해온 러시아의 대외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있어서 이념과 진영논리 보다는 자신들의 실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실용주의 전략을 선택하게 된 구조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및 2011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시 북·러가 합의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같이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에서도 러시아는 철도연결을 위한 사전단계의 준비를 지속해왔으며, 북한과도 관련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러시아 IMEMO연구소가 2011년 9월 발표한 ‘글로벌 전망 2030’ 보고서는 향후 북한 붕괴 추세가 강화되고 2020년대 후반 남북한이 실질적 통일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이 같은 견해가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IMEMO가 저명한 국책연구소라는 점에서 러시아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및 정책결정권자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EMO의 전망은 러시아의 미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푸틴체제의 등장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응 방향

푸틴의 집권에 따라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경우에 따라 일본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수출 창구가 될 수 있으며, 숙원사업인 시베리아·연해주 개발사업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푸틴에게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의 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북한에게도 안정적 수입원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추진은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레버리지 확보라는 국제정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가스관 연결사업의 전제 조건이 안보문제 불식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게 된다. 이 같은 점에서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러 정상회담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안전보장조치들에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천안 함·연평도 문제의 논의와 아울러 유사 사안의 재발방지에 대한 합의도 가능할 것이다. 가스관 연결을 위한 실용주의적 3자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지역 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경우 한국의 대선 및 현 정부 임기말이라는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 삼각경협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며, 북핵 프로그램의 진행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 그리고 시베리아 연해주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통일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적극적인 통일외교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북핵문제 해법 도출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고 다양한 차원에서 한·러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러 외교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공공외교 역량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 및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체제의 등장을 한국 통일외교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